

# ‘코드승진’ 통로 전략한 ‘개방형 교장’ 공모제

##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9명 중 16명이 특정노조 출신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평교사 출신 기준)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선발 과정에서 특정노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올해 전남 A학교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된 교사는 ‘A지회장을 지내며 학교혁신연수 등을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썼고, 2018년 경남 B고교 개방형 교장은 ‘B지회장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제마저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점프승진 통로로 전략했다”면서 “사실상 무자격 교장공모제처럼 무자격자 승진통로로 변질된 개방형 공모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정경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개방형으로 임용된 교장은 총 85명이며, 이중 21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다. 평교사가 교

장이 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면 29명 중 16명, 55.2%가 특정노조 출신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부인사는 8명만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됐다.

교청은 “개방형 공모제는 당초 특성화고, 예체능학교, 대안학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 인사가 임용된 비율은 개방형 교장 총 85명 중 9.4%, 단 8명뿐으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모교장 지원 시, 자기

소개서 등에는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교청 관계자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에 이어 개방형 공모도 ‘특정노조 특별전형’으로 전략해 교직사회의 인사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정치화한 초래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 대전교육청, 1,166억원 규모 추정 편성

## 학생 건강과 안전, 미래교육 기반조성에 중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정예산 2조 1,835억원보다 1,166억원(5.3%) 증가한 2조 3,001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02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19억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218억원, 전년도 이월금 27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과 미래교육 기반조성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170여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 인력 및 특수학교(급) 보조인력 지원 94억원 ▲학교 열화상카메라 및 방역물품 추가 지원 8억원 ▲긴급돌봄 운영 지원 9억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등 기초학력 지원 18억원을 반영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안전체험 활동 지원 23억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7억원 ▲직접계고 실습환경 개선 2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교육 변화 대비와 미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127억원을 편성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재건축하거나 새단장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비 88억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19억원 ▲초·중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13억원 ▲ICT 연계교육 3억원 등이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638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 139억원 ▲교실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165억원 ▲학교 안전제고시설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210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46억원 ▲직속기관 시설개선 26억원 등 연내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 79억원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6억원 ▲학기중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에듀테크 콘텐츠 활용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 언어치료 지원 등 5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30억원 등 135여억원을 편성했다.

대전교육청 오광열 기획국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뒀으며, 조기집행으로 완료된 사업비 집행액 감액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 수용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안전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면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초당적·조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법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4명, 교육부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만 10명이 되고, 여기에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등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 몇 명만 참여해도 쉽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여기에 더해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백년대계는

무색해진 현실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듯 기형적 법안을 여야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과 교육감협의체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정책의 일방통행은 견줄 수 없게 된다”면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교육이념과 방향 등 교육과정 총론과 새로운 교과 신설 역시 정부주도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결국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되레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제2의 교육부’, ‘교육부 2중대’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권의 교육정책 대박기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전략할 게 뻔하며, 오히려 교

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교육 미래 비전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립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데 근본 설립 취지가 있다. 국회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초정권적·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 도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교청 관계자는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인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 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면서 “그런 비전에 공감하고 합의할 국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안정과 발전을 위해 차라리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순신 기자】

## INDEX

- ▶ 교육정책 ▶ 1면
- ▶ 전국종합 ▶ 2면
- ▶ 전국사회 ▶ 3면
- ▶ 전국교육청 ▶ 4면
- ▶ 전국종합 ▶ 5면
- ▶ 충청교육 ▶ 6면
- ▶ 충청교육 ▶ 7면
- ▶ 전국교육 ▶ 8면
- ▶ 전국종합 ▶ 9면
- ▶ 오피니언 ▶ 10면
- ▶ 오피니언 ▶ 11면
- ▶ 2층1호 전국백일장대회 ▶ 12면

# 주식회사 엔피에스

- 정부조달물자판매(학교 및 관공서에 관련된 모든 가구류)
  - ▲ 학생용사물함, 사무용가구, 학생용책걸상, 테이블(식탁), 수강용테이블, 의자, 파티션, 중역용 가구, 쇼파 등
  - ▲ 협력사 : 서원퍼니처, (주)대우가구, (주)캠퍼스라인, 건영체어시스, (주)한길시스템, 체르마, 가구로 쇼파
- 에어컨크리닝

TEL : 041- 668- 7668  
TAX : 041-667-9087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2길 126-28 상가동